

美 바이든 당선과 우리나라 수출 환경 영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오세진 (ohsejin@kdb.co.kr)

- ◆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복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에 긍정적 요인이나,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경우 한·중 간 통상 마찰 가능성 상존
- ◆ 미국이 추진 중인 '제조업 공급망 재건 정책'으로 인해 미국산 구매가 강화되는 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원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보다 현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

□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정책 방향은 우선 우방국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이후 對중국 견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

- 바이든은 후보시절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, 미국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다자주의 무역체제 재건을 강조
 -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비판
 -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하여 핵심 교역국(EU, 캐나다 등)에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실수를 바로잡고, 손상된 우방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언급
- * Reuters(2020.11.24), "Rejecting Trump's foreign policy approach, Biden says 'America is back'"
 -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비난하며, 우방국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
 - 바이든은 중국의 환율 조작, 보조금 지급,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우방국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
 - 우방국이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강탈해갈 것이라며 단결을 촉구
 - * CNBC(2019.7.11), "Biden slams Trump's trade war even as he calls to 'get tough' on China"
 - ** J. R. Biden, Jr.(2020), "Why America Must Lead Again : Rescuing U.S. Foreign Policy after Trump", *Foreign Affairs*, Vol.99, No.2

□ 바이든 당선인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다자주의를 강조하였지만, 공공부문은 미국산 구매(Buy American), 미국 내 생산(Made in America)을 강조

- *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이후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(Buy American)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 (www.joebiden.com/made-in-america/ 참고)

-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기반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촉진하는 등 제조업 공급망 재건을 추진
 -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생산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, 혁신 제조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

< 바이든 후보의 공급망 재건 관련 공약 내용 >

1.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4,000억달러 예산 배정
2. 초고속 통신망, 인공지능, 친환경에너지와 같은 혁신기술 R&D에 3,000억달러 예산 지원
3.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미국산 구매(Buy American) 조항 범위 확대
4. 공공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입찰규정 조정
5. 미국 기업이 해외 생산 제품 및 서비스를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최대 30.8%의 법인세 추징
6.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10% 세액 공제

자료 : 조 바이든 공식선거 홈페이지(www.joebiden.com)

- 미국산 구매(Buy American) 추진은 정부조달 사업에서 국외 기업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'WTO 정부조달협정*'에 저촉 가능
 - *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에 개방하며, 외국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, 투명성을 원칙으로 함
 - 다자주의 복원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정부에게 있어 미국산 구매 전략은 주변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 상존

□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복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에 긍정적 요인이나,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,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

- 미국이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WTO의 위상을 재정립하고, 미국 주도의 TPP 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를 재추진한다면 통상 환경은 개선될 전망
 - 그러나 미국이 우방국에게 대중 무역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게 되면, 대중 무역 의존도*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 - *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품수출 비율은 34.1%이며, 상품수출 중 대중(홍콩 포함) 수출 비중이 31.1%로 높고, 대미 수출 비중은 13.5% 수준(2019년 기준)
 - 과거 사드배치 이후와 유사하게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도 직면 가능
-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정부조달시장(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)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
 - * 바이든 정부는 향후 4년 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경기부양을 위해 총 2조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,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풍력, 태양광, 2차전지 등 관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 중